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오바마, 부유층 감세연장 반대 및 추가 경기부양책 제안

-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대통령 시절에 단행됐던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 경기부양을 위해 R&D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함.
 -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클리브랜드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전체 인구의 2%에 불과한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반면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, 이와 더불어 R&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.
 - 베이너(Boehner)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현재의 감세정책을 2년간 연장하고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며, 이를 통해 첫 해에만 1,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함.
 - 2001년과 2003년에 입법화된 감세정책은 금년으로 만료되며 공화당 측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중단될 경우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함.
 -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정치쟁점화 되고 있음.
-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에는 기간시설 투자와 관련한 연방운송법안을 연장하고, R&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됨.
 -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연방운송법안(Federal transportation act)을 6년간 재승인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석유,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중단으로 충당할 계획임.
 -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금년 12월 만료 예정인 R&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구 연장할 것이며, 자산 취득 시 첫해에 50%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었던 특별법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비용처리한도를 100%로 확대함.
 -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였으며,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 공화당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(Washington Post 등, 9/8)